



TPP, 협상 타결 위해 '원칙'에서 물러나 보다 유연한 자세 보일지 주목

최근 미·일 협의, 수석대표 및 각료회의 등 TPP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예외없는' 원칙보다는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품개방에서 철폐가 아닌 관세인하를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등에서는 신흥국을 배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참여국들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현재 TPP 참여를 검토중인 우리나라는 이 같은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5월 TPP 각료회의 주요 쟁점 '합의' 실패

- 5.19~2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PP 참여 12개국 간의 각료회의 개최 결과, 협상 타결을 위한 향후 과제 등만 확인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
 - 직전에 개최된 수석대표회의 및 각료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분야인 상품, 지재산권, 경쟁정책(국영기업) 등에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실패
 - 각료회의 이전 TPP 참여 12개국은 5.12~15일 베트남에서 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 각료회의 개최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참여국들은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 상품 분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지재산권, 경쟁 분야 등 주요 쟁점의 의견 차가 여전하다는 평가

TPP 협상 추진 경과

연도	세부 추진동향
'06년	• 5월, P4 협정 발효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
'08년	• 美, 협상개시 의사 표명
'09년	• 美정부, 8개국 간 협상 개시 美의회 통보 - 기존 4개국+美, 호주, 페루, 베트남
'10년	• 3·6월 1,2차 협상, 10월 3차 협상(말레이시아 참가로 9개국), 12월 4차 협상
'11년	• 2·3·6·9·10·12월, 5~10차 협상
'12년	• 3·5·7·9월 11~14차 협상, 12월 15차 협상 - 멕시코, 캐나다 신규 참가로 총 11개국
'13년	• 3·5·7·8월 16~19차 협상 - 일본은 7월부터 공식협상 참가 • 10월 APEC 계기 TPP 정상회의 개최 - 기본 합의 실패,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 12.7~10일 TPP 각료회의 - 핵심 쟁점 미합의로 협상 타결 실패, 논의 지속 합의
'14년	• 2월 TPP 각료회의 개최 • 4월 TPP 美·日 정상회담 전후 美·日 상품협회의 개최 - 이견 좁혔으나 합의 실패 • 5월 TPP 각료회의 개최 - 협상 타결 위한 향후 과제 논의, 공동성명 채택

자료 : 각국 정부 자료 및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2

최대 쟁점 美·日 상품 논의 '개방 예외' 허용으로 가닥, 수준이 초점

□ (상품개방) 미·일 간 상품 개방 논의는 TPP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 TPP 12개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해 양국 합의 없이는 협상 진전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양국의 합의 내용이 여타 국가들 간 논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소위 성역 5개 분야¹⁾(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의 농산품에 대해 개방 예외를 요청해 왔고 미국은 일본 농산품 시장의 개방, 자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및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

미·일 간 상품 개방 논의(요약)

미국의 입장	분야	일본의 입장
•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주장	농산품	• 성역 5개 분야의 개방 예외 요구
• 가능한 장기간에 자국 시장 개방 • 일본의 안전·환경 기준 완화 요구	자동차	• 미국 시장의 조기 개방 요구 • 안전 등의 이유로 기준 완화 난색

자료 :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 최근 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이루어진 양국 협의를 통해 의견 차를 좁혔지만 쇠고기·돼지고기·자동차 분야에서 합의를 위한 장애물이 여전히 높은 상황

- 미·일 정상회담(4.24일, 도쿄)을 계기로 이뤄진 상품분야 협의에서 일본의 농산품 개방 예외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의견 차를 좁혔으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美 업계의 반발로 최종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일본의 쌀, 밀·보리 등은 현행 관세 유지하며 저관세 물량을 신설·확대하는 방향, 유제품은 일부 제품별로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및 대폭 인하하는 방향,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은 현행 관세 유지, 쇠고기·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대신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고 세이프 가드²⁾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힘
 - 하지만 쇠고기·돼지고기의 관세 인하 및 세이프 가드 도입에 대해 미국측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안전·환경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품 분야 합의는 어려운 상황

1) 성역 5개 분야는 HS코드 기준으로는 586개 품목에 달함

2) 관세 인하 이후 수입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 기준 관세로 돌아가는 제도

- (쇠고기 · 돼지고기)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 돼지고기의 주력 시장인 일본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일본은 방어적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고, 현재는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일본은 38.5%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일 · 호주 FTA와 같은 수준을 적용해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20% 전후로 인하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5% 등 한 자릿수까지 관세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9% 전후의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고, 관세 인하 폭에 따라 인하 기간, 세이프 가드 도입 등이 연동되어 논의 중
- 일본은 호주와의 FTA(14.4.7일 타결)를 통해 수입 관세를 냉동 쇠고기는 18년에 걸쳐 19.5%까지, 냉장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23.5%까지 인하³⁾하고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기로 합의
 - 일 · 호주 FTA와 같이 일본산과 직접 경쟁하는 냉장보다는 가공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냉동의 관세인하 폭을 더욱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돼지고기 관세는 일반적 관세와 달리 수입가격이 쌀수록 관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차액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기간, 세이프 가드 도입 등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시 차액관세제도는 ① 수입가격이 1kg당 64.53엔 이하의 저가 수입품의 경우 1kg당 482엔의 관세 부과 ② 수입가격이 1kg당 64.53엔~524엔의 경우 ‘기준가격(546.53엔) - 수입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 ③ 수입가격이 1kg당 524엔 이상의 경우 4.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미국은 가공용 등 저가격품에 부과되는 482엔의 관세를 20엔대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10~15년의 장기간에 걸쳐 100엔 전후까지의 관세인하를 주장하여 50엔 전후로 절충안 마련 중, 중가격품은 기준가격(546.53엔)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고가격품은 4.3%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일본 돼지고기 관세인하 관련 미 · 일 간 논의 내용

수입가격	차액관세제도	관세 인하 방안
① 1kg당 64.53엔 이하 저가격품	1kg당 482엔 부과	20~100엔까지 공방으로 50엔 전후 절충중
② 1kg당 64.53~524엔 이하 중가격품	‘기준가격(546.53엔) - 1kg당 수입가격’의 차액 관세 부과	기준가격(546.53엔)의 단계적 인하 방안
③ 1kg당 524엔 이상 고가격품	4.3% 부과	철폐하는 방안

자료 :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3) 일 · 호주 FTA의 일본 쇠고기 관세 양허는 냉장은 발효전 38.5% → 발효 1년 32.5%(6%p) → 단계적 인하 15년째부터 23.5% 유지, 냉동은 발효전 38.5% → 발효 1년 30.5%(8%p) → 단계적 인하 18년째부터 19.5% 유지, 세이프 가드 도입

- 이 같은 관세 인하 논의는 ① 관세인하 폭, ② 이행기간, ③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이 함께 묶여 있어 관세인하 폭이 클 경우 인하기간을 길게 하고 세이프 가드 발동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인하 폭이 작을 경우 인하기간을 짧게 세이프 가드 발동을 어렵게 하는 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큼
 - 다만, 세이프 가드 도입과 관세 인하에 대한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미·일 간의 절충 내용은 여전히 확정적이지 못한 상황
- (자동차) 일본의 미국 관세 조기 철폐 요구,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 양국은 일본의 TPP 협상 참가 전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産 차량에 대한 미국 관세는 TPP에서 허용되는 한 가장 긴 기간에 걸쳐 철폐토록 합의한 바 있으나 이 기간을 두고 일본은 한발 빠른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
 - 미국은 승용차 관세 2.5%, 상용차 관세 25.0%에 대해 20년 이상 상당히 장기간 뒤의 관세 철폐를 주장
 - 반대로 미국은 일본(관세 0%) 시장의 비관세 장벽 등이 미국産 자동차 수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및 안전·환경 기준 등의 완화를 요구
 - 미국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적은 제작사에 대해 일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국 생산 차량이 별도의 작업 없이 일본에서 그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요구
 - 동 제도는 한·미 FTA를 통해서도 도입된 바 있는데 제조사별로 25,000대까지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임
 -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 시장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

미·일 간 상품 개방 논의(상세)

국가	개방대상	쟁점 내용	
일본	농축산물 (성역 5대 품목)	쇠고기 · 돼지고기	• 쇠고기 관세: 38.5% • 일본은 호주 EPA와 유사한 관세 20% 전후로 인하를 주장하나 미국은 보다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여 9% 전후로 절충(냉장보다 냉동의 인하폭이 더 클 전망) • 돼지고기 관세: 차액관세제도 운영 - 수입가격이 64.53엔/1kg 이하 1kg당 482엔 부과 - 수입가격이 64.53~524엔/1kg 이하의 경우 기준가격(546.53엔)에서 수입가의 차액분을 관세로 부과 - 수입가격이 524엔/1kg 이상 4.3% 부과 • 저가격품의 경우 일본측은 관세를 100엔 전후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미국은 20엔까지 인하를 요구하여 50엔 전후에서 절충중 • 중가격품은 기준가격(546.53엔)을 단계적 인하, 고가격품 4.3%는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 • 관세 인하폭에 따라 관세 인하기간, 세이프 가드 발동 요건 등이 연동되어 논의중 - 관세 인하폭이 크면 인하 기간이 길고 세이프 가드 발동이 용이해지는 방식
		유제품	• 관세율: 탈지분유 218%, 버터 360%, 치즈 22.4~40% • 일정량 수입에 대한 저율 관세 할당으로 조정 • 미국측 관심이 높은 블루치즈 등은 대폭 인하 조정
		쌀	• 관세율: 쌀 778%, 밀 252%, 보리 256% • 현행 관세율 유지하며 저관세 물량 도입, 확대하는 방향 조정
		밀 · 보리	• 관세율: 쌀 778%, 밀 252%, 보리 256% • 현행 관세율 유지하며 저관세 물량 도입, 확대하는 방향 조정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 관세율: 설탕 328%, 전분 583% • 현행 관세율 유지하는 방향
	자동차		• 미국은 미국 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이 일본에 그대로 팔리도록 안전기준 적용의 완화를 요구
미국	자동차		• 관세율: 승용차 2.5%, 자동차 부품 2.5%, 상용차 25% • 일본은 미국측에 조속한 관세 철폐 요구 • 미국은 이에 대해 20년 이상의 장기간 단계적 관세 철폐로 대응

자료 :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3

선진국과 신흥국간 입장차 큰 지재권 · 국영기업, 예외 인정하는 방안 부상

□ (지재권 분야) 저작권 및 신약 데이터 보호 기간을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입장차가 컸으나 일부 분야에서 신흥국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

○ 신약 개발 데이터의 보호 기간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신약 개발비와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보호 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 등과 복제약 출시 지연 및 약가 상승을 우려하는 신흥국 등이 공방을 벌였으나 개발비 및 약의 종류에 따라 보호 기간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절충안이 부상

- 선도 제약 회사가 많은 미국(10년), 일본(8년) 등은 신약 보호 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신흥국 및 캐나다, 호주 등은 복제약의 보급을 위해 신약 데이터 보호 기간을 3~5년을 주장하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음
- 절충안은 개발비가 상당한 바이오, 항암제, 고부가가치 의약품 등은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을 10년 전후로 하고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의 경우 5년 전후로 설정하는 등 약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안이 부상
- 음악,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미국, EU 등이 설정하고 있는 사후 70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음
 - 일본(영화는 공표 후 70년),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저작권은 현재 사후 50년으로 규정되고 있음
- (국영기업)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철폐 논의는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크게 반발했으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음
 -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상의 우대 등을 철폐하여 민간 및 외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논의에 대해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크게 반발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음
 - 말레이시아는 정부나 국영기업이 물품조달 시 말레이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Bumiputra)을 실시하여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말레이계 주민의 빈곤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
 - 베트남은 7,000여개의 국영기업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규모의 은행, 항공 등이 국영기업임
 - 이러한 신흥국을 배려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국영기업 우대 철폐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국방·에너지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

4

여름 다시 합의 도모하는 TPP, 협상 타결 위해 절충안 실현될지 주목

- 금번 각료회의 공동성명에는 수석대표 회의(7월) 일정만 담고 차기 각료회의 일정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금년 여름 핵심 쟁점 합의를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
 - 금번 각료회의(5.19~20일) 공동성명에는 상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향후 수주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7월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미·일 양국 간 실무협의를 5.29일부터 개최할 예정
 - 향후 각료회의 일정이나 협상 타결 시한을 밝히지 않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맞아 여름 이후 미국이 선거정국에 돌입하는 점,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7~8월 경 핵심쟁점 합의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핵심 쟁점에 합의와 협상타결을 위해 최근 논의에서 상품, 지재권, 국영기업 등에서 보다 유연한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최근 미·일간 상품 협상에서 관세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가 논의되고 지재권·국영기업 이슈에서도 신흥국 요구를 수용하여 최저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등이 타결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됨
 - 일본 언론 등은 참여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TPP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등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이와 같은 절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주요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참여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TPA 법안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 TPP 협상 타결의 장애물은 여전히 높은 상황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명진호 (02-6000-5263, thetotoro@kita.net)

4)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는美정부가 의회로부터 대외무역협상의 권한을 위임받는 제도로 TPA 권한이 없는 경우 이미 국가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美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참여국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07년 3월 12일 무역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무역연구원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미래전략 제시, 심층적인 무역연구, 각종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무역이 국가경쟁력의 표상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진흥의 목표 하에 무역정책 및 전략 개발,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전망, 해외시장 정보제공, 다자간 협상동향 및 FTA 추진전략 개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 전략 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기업경쟁력실, 통상연구실, 미래무역연구실, 전략시장연구실 등 5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무역연구원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무역자료를 웹사이트(<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향분석실

- 수출입, 환율 및 원자재 동향 분석 및 전망
- 수출경쟁력 연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SBI)
- 무역의 구조변화 전망 및 정책제안
- 무역자료실 운영
- 무역연감, International TRADE 발간

■ 기업경쟁력실

- 인력교육 및 공급체계, 기업환경 개선 연구
- 무역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제시
- 신성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연구
- 중소기업 무역정책방향 연구

■ 통상연구실

-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 및 FTA 효과 실증 연구
- DDA,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통상 현안 연구
- 아시아 경제통합 대비 통상전략 수립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FTA를 활용한 유망 신흥시장(중남미, 아세안 등) 진출전략 연구

■ 미래무역연구실

- 한국 무역의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연구
- 한국 무역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연구
- 차세대 수출모델 연구

■ 전략시장연구실

- BRICs 진출전략의 체계적 수립
- 전략시장 마케팅정보 제공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연구
- BRICs INSIDE 발간
-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